

1.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 )
2. 본인의 일부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 ( )
3. 무권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
- \*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5~8번).
5. 甲은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 )
6. 乙의 중도금지급은 선이행의무이므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 )
7. 乙은 甲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8. 乙은 甲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9. 甲과 乙이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X토지가 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가 되었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 )
10.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 )
11. 무효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 )
12.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
13.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
14.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15.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 )
16.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
17. 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유효하다. ( )
18.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 ( )
19. 기한 도래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20.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 )

### 매일정리노트(O, X) 정답

1. (X) 최고권은 선악불문, 철회권은 선의자에게 인정된다
2. (X)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이다
3. (X)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4. (X)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5. (X) 유동적무효에서도 해약금해제는 인정된다
6. (X)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7. (O) 확정적 무효가 된 이후에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O) 부수적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9. (X) 이미 확정적 무효이므로 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가 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10. (X)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1. (X)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12. (O) 취소권의 행사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다
13. (X)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하는 것은 추인이지 취소가 아니다
14. (X)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취소이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5. (O)
16. (O)
17. (O) 상대방에게 유리한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8. (X) 조건부권리나 기한부권리는 확정되기 전에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19. (X) 기한은 조건과 달리 특약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20. (X)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